

사회복지법제와실천

(01주~07주)

담당교수 : 김운재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목차 | Contents

01주 01차시	법의 이념	003
01주 02차시	법과 규범	012
02주 01차시	사회복지법의 생성배경	021
02주 02차시	시민법과 사회법	028
03주 01차시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원	033
03주 02차시	불문법과 사회복지법 체계	043
04주 01차시	사회복지법의 이해	050
04주 02차시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056
05주 01차시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타법과의 관계	063
05주 02차시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076
06주 01차시	사회복지법의 이념 : 생존권	085
06주 02차시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093
07주 01차시	사회복지법의 권리	101
07주 02차시	사회복지수급권	107

제1주차 1차시	
강의주제	법의 이념
학습 목표	1. 법의 정의 및 분류를 비교할 수 있다. 2. 법의 이념 및 목적을 서술할 수 있다. 3. 법 이념의 3요소에 대한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법의 정의 및 분류 2. 법의 이념 및 목적 3. 법 이념의 3요소

[학습1]

1. 법의 정의 및 분류

1.1. 법의 정의

1) 법이란 무엇인가?

- ① 무인도에서의 혼자 살면 법이 필요하지 않음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 ②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규범, 규칙, 준칙)
- ③ 법은 강제력을 동반하는 규범임
- ④ 법은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도 포함
- ⑤ 법은 평균인(선량한 관리자)이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길 시에는 이에 따른 벌칙이 있음

2) 법의 정의

국가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정립되고,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규범

1.2. 법의 분류

1) 자연법

보편적인 법으로서 보편타당성을 지니며, 시대, 사상, 사회를 초월한 자연 질서, 자연적 정의를 기준과 이념에 따라 형성된 법

2) 실정법 : 자연법과는 달리 시대, 사상, 사회 내에서 제정, 법 효력 발생

(1) 국내법

① 공법(公法) : 실체법과 절차법 구분, 강행법

- 실체법

☞ 헌법 : 우리나라 모든 법의 기본법

☞ 행정법 : 행정소송

☞ 형법 : 형사사건

- 절차법 : 소송절차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② 사법(私法) : 개인 간의 문제 해결 기준, 임의법

- 민법, 상법

③ 사회법 : 제3법(공법과 사법의 영역 중간, 복합부문),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지님, 강행법

- 노동법, 경제법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복지법의 기본법)

(2) 국제법

① 국제조약, 협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묵시적으로 인정)

② 헌법 전문에서의 국제 관련 내용

대한민국 헌법전문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 하고, -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③ 헌법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④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⑤ 헌법 제60조 제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⑥ 사례 : 국제아동권리협약(UN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발효일 1990년 9월 2일 ; 대한민국 적용일 1991년 12월 20일(북한과 유엔 가입과 동시), 196개국 비준(북한 포함)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이하 생략)

[학습2]

2. 법의 이념 및 목적

2.1. 법의 이념

- ① 이념의 의미 -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
- ② 법은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
- ③ 법의 이념 - 법의 존재가치를 의미함
 - 법의 이념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 법의 정당성 판단의 근거, 법 준수 요청의 근거
 - 법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것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내용적·실재적·객관적인 문제 그리고 법의 목적
 - 법의 목적 중에서도 최고의 목표가 법의 이념이다
(홍봉수 외, 2020:13-18).

2.2. 법의 목적

- ① 법의 목적은 법적 효력을 지향, 법의 이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
 - ②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법의 목적은 이념과 동일(유사)
 - 사회정의구현, 공공복리 추구, 자유민주주의 실현, 법질서 유지 또는 확립 등
 - ③ 개별법의 목적 - 개별법마다의 고유의 목적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동법 제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④ G. 라트브루흐 - 법의 목적을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로 구분
 - 개인주의 : 개인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
 - 단체주의 : 국가나 사회단체의 이익을 우선시
 - 문화주의 : 문화를 중시, 문화의 가치 실현에 중점
- * 현대사회 :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공공복리를 추구

2.3. 법이념과 목적의 구분 : 4가지 사례 분석

1) 교육기본법

① 목적(제1조)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념(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① 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①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 이념 :

-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위 제3항에서 사회복지에 제공하는 자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③ 사회복지의 정의

-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정책의 총칭(출처: 두산백과사전)
- 사회복지란 어의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하고, 잔여적 복지정책 차원의 협의의 사회복지와 보편적 복지정책 차원의 광의의 사회복지로 구분함(출처: 김성천, 학지사, 2017)

④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차이

- 사회서비스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
- 현재 사회서비스는 협의적으로 바우처 사업을 주로 지칭하기도 함

4) 아동복지법

①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본 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법이념의 3요소(G. 라드브루흐)

주창자 : G. 라드브루흐

(1878-1949, Gustav Radbruch, 독일 법철학자, 법무장관)

3.1. 정의

- 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추구할 최고의 가치
- ② 합리적 기준이며 공평한 취급
- ③ 아리스토텔레스 -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일반적 정의로 구분
 - 평균적 정의 : 평등자 간의 병렬관계에 적합, 절대적·산술적 평등, 등가가치(급부 vs 반대급부)
 - 배분적 정의 : 불평등자 간 상하관계에 적합, 상대적·비례적 평등
 - 일반적 정의 :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공공의 선을 위한 의무(예. 순국)
- ④ 정의는 추상적 개념, 영구불변하지 않으며 보편적·절대적인 정의 부존재, 시대, 문화, 정치상황에 따라 정의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음

3.2. 법의 합목적성

- ① 합목적성 : 일정한 목적에 맞추어 방향이나 활동을 결정하는 성질이나 원리를 의미, 어떠한 법이 그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원리
- ② 합목적성은 사회적, 정치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 ③ 법이념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法言) * 합목적성

3.3. 법의 안정성

- ①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킴으로써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 도모
 - 괴테, 부정의로운 법이 무질서 보다는 낫다 * 법의 안정성 강조
 - 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법이 바르게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도 중요
- ② 법의 1차적 기능 - 사회질서 유지, 평화 회복과 유지
- ③ 법의 안정성 : 법 자체 안정성과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추구
 - 잦은 법 제·개정은 법 안정성을 떨어뜨려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
- ④ 법의 안정성 조건
 - 법의 내용 명확화
 - 법 개정이 너무 잦으면 안 되고, 쉽게 개정되어서도 아니됨
 - 평균인(선량한 관리자)이 법 실행(적용)이 가능한 것
 - 시민들의 법의식에 부합
 - 법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 부조리(편법)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 일부 제3세계 국가에서의 법 근거로 수많은 부조리가 발생

제1주차 2차시	
강의주제	법과 규범
학습 목표	1. 규범으로서의 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규범과 강제규범을 이해할 수 있다. 3. 문화규범과 행위규범을 기술할 수 있다. 4. 조직규범과 재판규범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규범으로서의 법 2. 사회규범과 강제규범 3. 문화규범과 행위규범 4. 조직규범과 재판규범

[학습1]

1. 규범으로서의 법

1.1. 규범의 정의

- ① 법은 규범 중 하나
- ② 규범은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의미
- ③ 규범이 없는 사회가 존재하기는 곤란
 - 규범(법) 없는 사회 존재는 어려움이 있음
 - 작은 소수의 특정집단, 혈연관계 등에서는 작은 규모, 일시적으로 가능할지라도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사회구성은 힘듦
- ④ 개인 간의 이익 충돌, 개인과 집단(단체), 국가와의 충돌 시 해결 기준
- ⑤ 함께 생각해 볼 말(비판, 평가)
 -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 모든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일지라도 법은 그 사회에 꼭 필요한 것
 - 법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

- ⑥ 현대사회에서는 법(규범, 규칙) 없이는 생활이 곤란함
 - 작은 동호회 모임에도 회칙이 있고, 대부분 모든 회사는 회사 규정, 정관 등이 있음
- ⑦ 사회복지시설에도 법인 정관과 각종 규정이 있음
 -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해당 시설 관련 사회서비스법 (예.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시설 내부적인 법으로는 법인 정관과 시설운영규정, 업무지침 등에

1.2 규범의 성격

- ① 규범에는 강제규범인 법과 비 강제적 규범인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등이 있음
 - 법은 국가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 된 사회에서 정립
 - 그 구성원에 대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스스로 실현하게 되는 사회규범
 -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이며 당위는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함(홍봉수 외, 2020: 13-18).
- ② 규범의 특성
 - 법은 사회규범이다.
 - 법은 행위규범이다.
 - 법은 강제규범이다.
- ③ 규범의 역할
 -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직무행위가 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형법이라는 규범에서 악인의 살인이 살인죄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음.
 - 규범은 사실이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도식으로서의 역할을 함.

1.3. 법규범의 종류

- 1) 규범의 종류 : 법규범, 종교, 윤리, 도덕, 관습, 예절 등
 - ① 규범의 종류에 종교, 윤리, 도덕, 관습, 예절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함
 - ② 법규범만이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함

- ③ 관습은 때로는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법규범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기도 함
- ④ 한 나라의 종교, 문화, 관습 등은 그 나라의 법규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 사회상규상이라 함은 법규범을 제외한 이러한 타 규범들에 비추어 본다는 의미 즉, 그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기준을 말하는데, 일반국민(평균인)의 건전한 도덕, 윤리의식임
- ⑥ 소위 김영란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범위를 놓고 법 제정 시 논쟁 가열 (예 : 학교 졸업식 또는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꽃조차 달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
- ⑦ 따라서 각종 규범에서 법규범만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규범만이 아닌, 도덕, 윤리, 종교, 관습, 예절규범 등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규범이라는 사실을 기억
- ⑧ 현대사회에서는 악육강식 또는 피해에 대한 직접구제방식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법규범에 의한 보호 및 구제방법을 취하고 있음 (예 : 중소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중소기업 을 보호, 쌍방폭행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
 - * 쌍방폭행죄는 정당방위와 구별해야 하는데, 정당방위는 위해(危害)을 예방 또는 방위(防衛)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음. 그러나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그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형된 처벌을 받음

2) 법규범을 그 형태(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규범으로 분류

- ① 법규범의 분류 : 사회규범, 강제규범, 문화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및 재판규범
 - 일반적인 형태 분류 : 사회규범, 행위규범, 강제규범
 - 구조적인 형태 분류 : 조직규범, 문화규범, 재판규범
- ② 각 규범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

2. 사회규범과 강제규범

2.1. 사회규범

- 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어떠한 일정한 규범(규율) 없이는 공동체 생활유지가 곤란
 -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법이 없으면 개인 간의 갈등,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사람은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인 간의 이익 충돌이
불가피함
- ② 사회규범(준칙)의 사전적 의미
 - 한 인간이 타인·집단·공동체, 나아가서 민족이나 국가와 관계를 맺
어갈 때 요구되는 사고와 행위양식(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
견·태도·행동의 비교적 지속적 성격을 가진 태도 준칙(출처 : 두
산백과사전)
- ③ 사회에서의 약속 - 규범은 사회에서의 개인 간의 이익충동 발생, 분쟁,
갈등
- ④ 마땅히 해야 할, 또는 해서는 안 될 당위규범 ≠ 존재의 법칙,
필연법칙
 - 법은 사람(자연인)이나 법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또는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규정(당위규범)
- ⑤ 사회규범은 존재나 필연의 법칙인 자연법과는 구별
 - 자연법칙은 예외가 없으나, 당위법칙(규범)에는 예외가 있음
* 자연법칙 :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 ⑥ 사회규범에는 도덕, 종교, 관습도 있음
 - 오래 전 사회가 발달하기 전에는 도덕, 관습, 법, 종교 등이
혼합되어 사회에 적용되었으나, 전문영역의 발달로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

2.2. 강제규범

- ① 법규범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으로서의 강제성 있음
(물리적, 권력적)

- 어떠한 범죄, 위반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형벌, 강제집행 등을 시행함으로써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한 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
- 강제력은 법의 본질적 속성을 잘 나타내 주는 단어
 - * 구속수사, 강제집행, 징역 등
- ② 누구나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기에 법질서를 위해 강제적으로 이행 (국가규범)
 - 법은 평등원칙에 의해 준수되어야 함
 -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 민주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
 - 행위규범에서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안 된다 등의 법률에서 이를 어겼을 경우, 강제로 법 위반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이 강제규범임
- ③ 물리적 강제성은 법규범과 타 규범(도덕, 관습, 종교)과 구별
 - 독일 법학자 예링(R Jhering),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 * 강제성은 법의 본질 중 하나
- ④ 도덕, 윤리규범을 위반하였을 때는 비난 받는 정도이지만, 법규범을 어겼을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음

[학습2]

3. 문화규범과 행위규범

3.1. 문화규범

- ① 문화란 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주의 생활·행동양식, 종교, 도덕, 예술, 각종 제도 등이 포함
 - 한 사회의 합의의 산물(정신적·물질적 유산)
 - 용어 : 문화는 영어로 culture 라고 하는데, 이는 라틴어의 cultus에서 온 말로 농경사회에서의 경작한다(cultivate)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용어임

- 문화는 한 단어로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다의어(多義語)임, 좁은 의미로는 문학, 예술 등 우리사회의 문화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사회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이며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
- 우리 사회에서도 의식주문화, 규범문화(사회질서, 제도), 관념문화(사상) 등으로 구분 사용하고 있음
- 자기문화우월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 ② 각 나라마다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독특한 문화가 존재
- ③ 법은 그 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음
- ④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듯이 법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화하며 발전
- ⑤ 법과 문화상대주의 갈등(예 : 다른 나라 법은 그 나라 문화를 반영)
 - 문화상대주의 :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견해, 문화의 다양성, 해당 국가의 문화 독특성을 수용하여 판단
- ⑥ 법은 그 나라의 어느 일정 문화수준을 나타냄
 - 타국의 독특한 문화라 할지라도 법 적용국가에서의 법 저촉 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음
 - (예. 명예살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종교행위 등)

3.2. 행위규범

- ① 법규범은 일반적으로 행위규범 -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법적 행위로 인정
- ② 어느 사람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은 무행위로 법적 제재 대상 아님
 - 인간의 내적, 심리적 작용에 대하여는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음
 -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③ 무작위범(無作爲犯) - 법적으로 책임 있는 자가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대상 ≠ 작위범의 반대 개념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법률상 기대행위를 하지 않은 자(예. 퇴거불응죄 등)
 - * 퇴거불응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2항,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

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학교 교사는 학생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할 책임 있음
 - 선장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사 시 구조할 책임 있음
 -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예. 유기죄)
- * 법률용어 : 위법성 구성요건

4. 조직규범과 재판규범

4.1. 조직규범

- ① 법은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해당기관에게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
- ② 헌법
 -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 규범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자치 조직의 원칙을 규정
- ③ 우리나라에서 조직규범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구분(분장), 그 권한을 위임하는 규범임
 - 조직을 규정하는 법 → 조직규범
- ④ 헌법의 위임에 따라 법률(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조직과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 ⑤ 주요 법 사례
 - 정부조직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원조직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재판규범

- ① 법은 재판규범 - 사법부에서 재판할 때 판결 기준(준칙)
 - 사법부에서 판사가 재판할 때 적용하는 법규범(예. 형법)
 - 사회규범을 어겼을 때(위배), 재판규범에서 법에 따라 이를 판단(선고)하는 것
- ② 법조항이 행위규범의 성격을 지닌 경우, 거의 대부분은 동시에 재판규범에 해당
 -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은 재판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중성)
- ③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벌)로써의 재판규범
- ④ 법 적용 사례
 -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위 사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재판규범이 됨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중처벌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주차 1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생성배경
학습 목표	1.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사회복지법 형성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부양의 한계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서술할 수 있다. 3. 영국의 빈민법 제정과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4. 독일과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관련법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전개 2. 가족부양의 한계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3. 영국의 빈민법과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 4. 독일과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관련법

[학습1]

1.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전개

1.1. 산업혁명의 시작

- ① 영국, 18c 중반 시작
- ② 기술혁신 - 방적기계의 개량
 - 수공업에서 기계 산업으로 발전
 -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교통수단의 혁신
- ③ 벨기에 등 유럽사회로의 확대
- ④ 대규모의 공장 설립과 운영
 - 수많은 노동자들이 농촌지역에서 도시로 이동
 - 가족생산방식의 수공업에서 공장에서의 대량생산 방식으로 전환
 -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사회 변화
 - 농경지 중심의 정착생활에서 도시 중심

- ⑤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형성 초기
 - 산업혁명이 세계경제 발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은 사실
 - 영국의 18c의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함
 - 최근 제4차 혁명을 논하고 있음

1.2. 산업혁명의 발전

- ① 산업혁명으로 도시화 가속화
 - 탈 농촌 현상 보편화
 - 농촌인구 급감
 - 도시빈민화, 도시 변두리
 - 도시빈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 생계유지비 이하 급여, 갈수록 노동자의 삶이 곤궁해짐
 - 차라리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농촌에서 다함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으나, 도시공장근로자로 이주한 이후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짐
- ② 기계탄압운동
 - 노동자들이 기계화에 반대, 공장기계파괴
 - 결국은 산업화라는 대세를 꺾지 못함
- ③ 자유주의 경제체제 주도
 - 무한 경쟁체제, 양심과 인권 무시, 기업 이익원칙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회
 - ※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史), 사회복지행정론 및 지역사회복지론 등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람

1.3.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의 대립

- ①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본가 계층 형성
 - 자본가 vs 노동자 계급의 대립 구도 형성
 - 임금착취와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 연대, 단결
 - 노동자들은 갈수록 빈곤화, 자본가들은 부익부 현상
 - 농경사회에서 가장의 몰락
(농장 경영주에서 도시 빈민근로자로 전락)
- ② 현재의 경제법이 없는 시대라서 자본가를 통제할 경제제재가 없었음
- ③ 도제를 이용한 아동착취도 매우 심각

- ④ 아동들은 8세부터 공장에서 일할 수 있었음
- ⑤ 자본주의의 병폐가 보이기 시작함(양극화 현상)
- ⑥ 사회적 불평등, 당시의 자본가 중심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체계의 문제 제기
- ⑦ 노동자계층은 배움의 기회가 없고, 자본가와 상류층에만 기회 제공
- ⑧ 사회계층 간의 대립 : 경제적 강자(자본가) vs 약자(노동자) 대립각
- ⑨ 자본가와 국가권력과 결탁, 노동자는 더욱 불리한 위치

1.4.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의 대립

- ①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 : 국가의 책임이나 역할 전무
- ② 자본주의 사상의 지배
- ③ 사회(민주)주의자의 등장
- ④ 19c 마르크스 등 사회주의자(공산당)들의 부각

2. 가족부양의 한계와 사회복지의 필요성

2.1. 시민사회에서 가족부양의 한계

- ①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가장이 농장주이면서 고용주 역할
- ② 산업혁명 사회 이후에는 가장의 역할이 가난한 생산자로 역할 전환
- ③ 시민사회에서의 사적 자치에 의한 계약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부의 축적 관계를 악화시킴
- ④ 양극화 현상, 가난한 도시 근로자의 생활 빈곤의 심화
- 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개인 또는 가족복지, 빈민 간 상부상조(십시일반)의 한계

2.2. 사회복지의 필요성

-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필요성 대두
 - 토의 : 우리나라 부모부양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의식 변화 진행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금 납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책정)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였음

[학습2]

3. 영국의 빈민법과 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

3.1. 영국 엘리자베스1세 빈민법(1601년)

- ① 영국의 빈민법은 엘리자베스 1세(1558-1603) 이전에도 존재 :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법을 처음 제정한 것은 아님
- ② 영국은 성공회(Church of England) 교구(Parish) 중심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빈민구제 활동
 - 성공회 대주교와 왕권 사이의 갈등
 - 종교개혁 등으로 인하여 교회의 교권이 약화
- ③ 여왕은 빈민구제를 교회에서 국가 행정기관으로 이전
- ④ 영국이 근대국가에서 처음으로 빈민구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천명
 - 빈곤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주체)을 선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각 교구(Parish, Parish Church)에 빈민감독관 배치
 - 교구별 필요 구빈세(Poor tax)를 징수하여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
 - * 교구 이기주의가 발생하기도 함
 - 종전에는 빈민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았음, 혈연중심, 씨족(마을)공동체에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

3.2. 구제대상자인 빈민의 분류

- ① 노동능력자(Able bodied Poor) : 노동을 강제시키고(작업장), 거부자는 투옥 * 현대복지국가 - 조건부 수급자
- ② 노동무능력자(Impotent Poor) :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기아) 구빈원(Almshouse), 자선원에 수용 및 보호
 - * 현대의 사회복지시설의 전신
- ③ 부양아동(Dependant Children) : 강제적으로 도제(Apprentice)로 보냄
 - * 후에 빈곤 노동아동 보호를 위한 공장법 제정 기초(1802년 최초 제정, 1833년 근대적 공장법 제정)

- ※ 빈민법 당시 구제정책의 시행은 강제력이 동반된 사회복지정책 (제도, 서비스)였음
 - 현대사회에서는 강제력 동원 곤란(예. 서울역 앞, 지하철 내 노숙자 강제 퇴거 시 인권문제 제기)
- ※ 지금도 위의 기준을 준용하여 노동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의무를 지며, 노동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시설에서 보호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강제 노동을 하지 않으나 시설에서 보호, 양육

3.3. 토의사항

- ① 사회복지적 관점도 있었지만, 당시 부랑인들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통제할 목적
 - 부랑인들이 대우가 좋은 교구로 편중되고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
- ②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 관계에서 주도권을 여왕이 통제(왕권 강화)
- ③ 일부 학자들은 형법적 요소가 포함된 사회복지법이라고 봄
- ④ 사회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목적은 현대사회에도 있음
- 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들은 부당이익 및 허위로 혜택을 본 사람이나 기관에게 벌칙으로서 처분규정을 가지고 있음
- ⑥ 따라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을 사회통제 목적의 사회복지법이라고 단순히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음 ← 형사법
 - * 사회복지의 통치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당근의 역할이라고 비판할 수 있음 ← 사회주의자
- ⑦ 빈민법은 현대사회에서의 시민의 사회복지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법인가?
 - 당시 빈민법은 권리로서의 사회권(사회복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님
 - 권리로서의 사회권(사회복지권)의 성립은 시민권 사상 이후의 개념임
 - 당시의 빈민법은 빈민들의 권리를 인정한 빈민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
- ⑧ 빈민의 구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선언한 것이 큰 의의임

- ⑨ 아동의 빈곤예방을 위해 요보호아동 도제 제도를 이용한 것은 유익한 제도임
- 남아 : 8-24세까지 기술 배움
 - 여아 : 8-21세까지 가정집 하녀 등
- ※ 이후 1834년 빈민법의 등장으로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빈민법은 구빈민법, 1834년 법을 신빈민법이라고 칭함.
- ⑩ 신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나,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에 있다고 보고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의 시도보다는 비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시혜적인 성격을 띠었으며 사회통제적인 구제, 신빈민법의 빈민구제 원칙은 오늘날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전국균일의 원칙 : 빈민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을 통일하여 작업장 노역자에게 균일하게 처우한다.
 - 작업장 활용의 원칙 : 노약자나 질병자 등은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노동가능자는 작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열등처우의 원칙 : 국가의 구빈수혜자에 대한 구호 수준은 노동자의 최저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

4. 독일과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관련법

4.1. 독일의 초기 사회복지 관련법

- ① 산업혁명의 영향이 뒤늦게 독일에 전파
- 도시화 형성
 - 사회주의 사상 영향
- ② 지주계급, 신흥자본가계급, 노동계급 간 갈등 심화
- ③ 비스마르크, 국가사회보험 최초 시행 : 질병보험법(1883년), 산재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년)
- * 폐질 : 고칠 수 없는 병(an incurable disease)
 -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 자본가계급 통제 필요
 - 노동자계급 비위(끌어 안기)

- * 비스마르크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참여의식과 권리 고취시키는 계기, 사회주의 운동은 더욱 확산되는 역결과 초래, 하지만 사회복지체계가 구축되는 결과 나타남
- *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 시행국가가 됨, 영국보다 빠름

4.2. 미국의 초기 사회복지 관련법

- 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1929년 미국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 실시
 - ② 종전 미국의 개인주의 사상에 정부(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짐
 - ③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수정 불가피, 주식시장 몰락
 - ④ 국가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 실시 - New Deal(사회보장정책)
 - 구호사업, 경제회복, 개혁, 국책사업
- ※ 사회보장(Social Security)란?
- 1935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 사회보장법(1935년)
 - 국가가 국민을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정책

제2주차 2차시	
강의주제	시민법과 사회법
학습 목표	1. 시민법의 등장배경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법의 주요 지도원리를 구분할 수 있다. 3.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4. 시민법과 구별된 사회법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시민법의 등장배경 및 의의 2. 시민법의 주요 지도원리 3.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4. 사회법의 특징

[학습1]

1. 시민법의 등장배경 및 의의

1.1. 시민법의 등장 배경

- ① 시민법은 근대 시민사회를 전제로 출발
- ② 시민사회 : 18c 말 ~ 19c 초, 중세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세운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 세운 사회
- ③ 시민사회에서의 주도층은 시민계급(부르주아계급, Bourgeois)인 자본가 계층임
 - * 부르주아의 뜻 : 성벽에 거주하는 자, 도시상공업자 주축, 피지배계층 중 상위계층
 - * 농민, 노동자 계급 : 프롤레타리아계급(Proletarian), 무산자(토지), 노동자 계층
- ④ 시민 계급은 부르주아 계급 중심
 - 봉건주의 타파 노력
 - 봉건주의 세력 : 지배계층, 귀족, 성직자 등
 - 봉건주의 사회에서 신분적으로 종속된 계층의 반란

- 지배계층의 경제적 착취에 반항
- 자연법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삼음
- 자연법 사상가 출현 : 그로티우스, 홉스, 루소 등
- 천부인권설 지지, 자유, 평등, 독립적 인격 특징으로
경제적 자본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요구

1.2. 시민법의 의의

- ① 인문주의 사상 지배 :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
- ② 중세 암흑시대를 벗어난 새로운 세상 도래
- ③ 자연법 사상가 출현 : 그로티우스, 홉스, 루소 등
- ④ 중세 도시에서 봉건주의에 대항한 계층, 시민계층(부르주아계급)이
주도
- ⑤ 국가 vs 개인(부르주아계급) 대립
- ⑥ 지금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법 형태는 시민법을 출발점으로 함
 - 시민법의 산물
 - * 신흥부자들에게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소유권, 자유계약 등의 원칙

1.3. 시민권(T. H. Marshall)

마샬의 시민권은 영국적 개념으로서 그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 ① 공민권의 형태
 -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계급이 추구했던 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 개념
- ② 참정권의 형태
 - 참정권 역시 시민혁명의 산물로 등장한 것으로서 입법부인 의회와
지방의회에 시민계급의 대표가 진출하기 시작, 공민권을 법적인 권
리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참정권은 정치영역에서의 시민권이다.
 - 참정권은 민주주의적 시민권으로서의 의미
- ③ 사회권의 형태
 - 사회권은 공민권과 참정권을 토대로 하여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범위의 권리를
의미

2. 시민법의 주요 지도원리

2.1.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 ① 사유재산권의 절대적 지배권 인정 : 소유권 절대 원칙
- ② 봉건주의 하에서의 지배층들에게 피지배층은 불가항력으로 재산을 빼앗겼음
- ③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 및 처분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음
- ④ 국가와 타인은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됨
- ⑤ 신흥지주, 신흥자본가들에게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2.2. 계약자유 원칙

- ① 사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은 지켜져야 함 : 사적 자치의 원칙
- ② 자유로운 계약에는 법적인 권리 의무관계 성립
- ③ 등가교환(等價交換)관계 형성
- ④ 국가는 이를 간섭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함
- ⑤ 자본가들의 횡포라 할지라도 노동자와 자유로이 계약을 하였으면 이를 국가나 제3자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임
 - 당시 국가와의 계약의 주체
 - ☞ 국가와 시민계급(부르주아 남성계급)
 - ☞ 계약 당사자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기 때문
 - ☞ 여성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배척

2.3. 과실책임의 원칙

- ①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경우 책임 추궁
- ②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음
- ③ 피해 당사자가 사용자(타인)의 고의나 과실 있음을 증명해야 함 (입증책임, 거증책임)
- ④ 자본가가 과실이 없으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천명
 - * 이러한 법은 현대 우리사회에서도 얼마 전까지도 있었음
 - (예 : 산재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음)

[학습2]

3.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등장

- ① 시민법은 봉건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초기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
- ②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시민법이 한계 봉착
- ③ 시민법 사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발생
 - 무산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음 : 도시빈민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
 - 사적 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등 시민계급 중심
 - 시민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
- ④ 시민법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야경국가 수준
 - 시장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계 하에서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로 전환 요구
- ⑤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사회정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봄
- ⑥ 이러한 시민법의 한계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
 - 사회법이 등장

4. 사회법의 특징

4.1. 소유권의 사회성

- ① 비록 사인 간의 계약일지라도 무한정의 신성불가침 계약이 아님
- ②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간섭과 제재가 필요
- ③ 경제법 제정으로 소유권 행사 제한
- ④ 재분배 원칙

4.2. 계약의 공정성

- ① 시민법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과정에서 불평등 초래
- ② 대등한 계약관계 성립을 위한 계약 공정성 추구 노력 필요
- ③ 노동법 제정이 필요
- ④ 현대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이 필요하게 됨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됨

4.3. 무과실(집합적) 책임원칙

- ① 시민법에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에서 무과실책임원칙으로 전환
- ②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는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있으나, 사업주(자본가)의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 피해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장, 사용자와 국가, 노동자가 집합적 책임을 지는 형태
 - * 노동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산업재해를 분석

<표> 시민법과 사회법 비교

구분	시민법	사회법
법 명칭	근대법	현대법
법질서	자본주의적 법질서	수정자본주의적 법질서
이념과 사상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초기 (상업,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사후적 대응, 경제생활에 대하여는 소극적 개입 원칙	사전적 개입, 통제, 조정 역할 시장기구에 대한 통제, 조정,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 주도 등
권리	자유권	사회권(생존권, 복지권)
인간관	평등한 추상적인 인간	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법원칙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소유의 사회성 계약의 공정성 집합적 책임원칙
법 영역	민법, 상법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제3주차 1차시	
강의주제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원
학습 목표	1.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원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성문법의 주요 법원들을 구분할 수 있다. 4. 헌법에서의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회복지법 법원의 개념 2.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원 3. 성문법의 주요 법원 4. 헌법의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규

[학습1]

1. 사회복지법 법원의 개념

1.1. 법원(法源, Source of Law) : 법의 연원(淵源)의 약자

- ①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 ② 법의 모법(母法)
- ③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
- ④ 법의 존재 형태
- ⑤ 법관이 재판의 근거(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

1.2. 법원의 형식에 따른 분류 : 성문법, 불문법

- ① 성문법 : 입법부에서 제정된 문서화된 법(법률), 일정한 형식과 절차 존재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 : 함무라비 법전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및 법규 등
 - * 중앙행정기관 : 법률, 시행령(명령), 시행규칙

- 명령 : 행정기관에서 규정하는 영(令), 대통령령, 각 부령(장관)
- * 지방자치단체 : 조례(지방의회 제정),
규칙(지방자치단체장 제정)
- * 국제조약 및 법규 : 헌법 제6조 효력 근거 명시

헌법 제6조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60조

-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 법체계의 예 : 사회복지사업법(법-명령-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에는 전문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음

* 법체계의 예 : 지방자치법규(서울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체계의 예 : 지방자치법규(가평군)

가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북돋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총각으로서 군에 살고 있는 사람 중
해당연도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
2.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으로서 월 소득이 1백만 원 이상인 사람
3. 위 요건을 충족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

- ② 불문법 : 비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條理)
 - 자연법 사상
 - * 조리 :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뜻함, 조리는 성문법과 불문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예 : 솔로몬의 판결)

2. 성문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원(法源)

2.1. 사회복지 관련법 : 성문법

- ① 성문법주의 : 현대국가 대부분은 성문법 형식의 법전을 가지고 있음
- ② 불문법은 예외 사항(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음
- ③ 성문법의 장점 :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 법의 명확성
- ④ 법이 성문화 되어 있으면 모든 국민이 그 법을 쉽게 인지 가능
 -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높음
- ⑤ 성문법의 단점 : 매우 형식적, 고정적,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함
 - 개정 절차 등이 까다롭고 정파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개정이 어려움
 - * 법 개정 시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정, 이해, 이권 등에 따라 개정, 미합의 속출

2.2. 성문법 체계

- ① 헌법 - 법률 - 명령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규칙
- ②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음
- ③ 지방자치시대에서의 지방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임

헌법에서의 지방자치 관련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학습2]

3. 성문법의 주요 법원

3.1. 헌법

- 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상위법
- ②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
- ③ 헌법에만 전문이 있음

3.2. 법률

- ① 입법부에서의 제정, 공포된 성문법
- ② 한계 : 헌법을 위반할 수 없음
- ③ 헌법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규정에 대한 법률 제정, 시행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 필요
- ④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복지 관련법의 모법(기본법)
- ⑤ 사회복지사업법은 타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인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법임

3.3. 명령과 규칙

- ① 입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정한 성문법
- ② 국회(입법부)에서는 법률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영(령)으로 정하도록 절차
- ③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것 -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④ 시행령과 시행규칙 : 보다 전문적, 세부적, 구체적 시행 가능토록 함
- ⑤ 명령 주체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⑥ 명령의 종류 : 위임명령, 집행명령

* 헌법의 명령과 규칙 관련 규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시행규칙의 법 적용 논란(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

-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이 내부 규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효력 없음(비 법규범)
- 현실적으로 법 규범에 포함시켜 적용해야 함(법규 보충성)

3.4. 자치법규(조례, 규칙)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주관
- ② 필요시 지방자치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
- ③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 ④ 규칙은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 ⑤ 제정 필요 사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고려하여) 시행하기 위함
 -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구체성 확보

3.5. 국제법

- ① 국제법의 종류 :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 ② 국제조약 : 조약, 협정, 협약, 약정 등 다양
- ③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
- ④ 국제법은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임
- ⑤ 참고. 세계인권선언문 - 헌법 등 여러 국내법에서 인용
 - 유엔 세계인권선언문(U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12.10.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여야 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⑥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헌법의 주요 사회복지 관련 법규

4.1. 헌법에서의 사회복지 관련법

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

- 행복추구권(제10조), 교육권(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 및 주거권(제35조),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권(제36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사회보장기본법

① 사회보장기본법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4.3. 사회복지사업법

① 사회복지사업법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의 제공자는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주차 2차시	
강의주제	불문법과 사회복지법 체계
학습 목표	1. 불문법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체계를 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을 구별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불문법의 개념 및 내용 2. 사회복지법의 체계 3. 사회보장기본법

[학습1]

1. 불문법의 개념 및 내용

1.1. 개념

1) 불문법(불문법원, 不文法)은 성문법 이외의 법

- ① 성문법으로 모든 법을 다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성문법과 같이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지 아니한 법
 - 인간의 모든 생활관계를 성문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
 - 전통이나 경험에 의해 형성된 행위준칙이, 구체적인 사실에 일정한 법규범을 적용
 -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음
 -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의 국가들은 불문 헌법
 - ② 현행 법률에서 불문법은 민법과 상법에서 적용하고 있음
 - ③ 대표적인 불문법은 판례
 - 영·미계 : 판례 중심의 불문법
 - 대륙계 : 독일 등 중심의 성문법
- * 최근 : 지역 불문하고 판례법에 의한 불문법원 인용과 성문법 이용 판결 → 혼용

1.2. 내용

1)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① 관습법

-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 관행에 의해 발생한 생활규범
- 국가사회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는 규범
-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형성
-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함
첫째, 관습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존재하여야 함
둘째, 관습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셋째, 관습에 대하여 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함
넷째, 관습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거나 또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함
- 관습법의 조건 : 재판에 의해 채택이 될 때 비로소 관습법이 되는 것
- 사례(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

法令 中の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사례(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

商事에 관하여 本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것
- 판례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법원이 동일한 판결
-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
- 반복적인 동일 또는 유사 사건에 대한 선편례(상급심)를 인용할 경우, 이를 판례법이라 볼 수 있음

- 후속법원에 영향을 주는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을 지칭
- 판례법은 최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
- 하급심보다 상급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 판사의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것임
 - * 하위법원을 기속하는 판례
-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기속 : 얹어매어 묶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③ 조리(條理)

-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원리
- 사물과 자연의 본성에 적합한 일반원칙
-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해석의 기본 원리
- 조리법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중요한 법원
- 현행 사회복지법이 대상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함
- 법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리에 의해 판단 내지 해석
- 조리는 사회복지법의 문제점을 보충해 주는 법원으로서 중요
-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인간다운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리법은 중요
- 복잡한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로서 그 흠결을 보충
- 법 적용 :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 적용
 - *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원
- 법적 규범의식 : 사회통념, 신의성실의 원칙, 공서양속 원칙, 비례원칙 등은 조리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 사례(사회복지법) : 아직 우리나라 역사가 짧은 관계로 사회복지 관련 관습법은 찾기 힘들지만, 사회복지에 관한 상급심의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

[학습2]

2. 사회복지법의 체계

2.1. 사회복지법의 일반 체계

- ①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구분
- ②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 ③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④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 ⑤ 사회서비스법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⑥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보장기본법

3.1. 사회보장기본법의 이해

①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법

②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동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장이란 의미 파악 매우 중요

③ 사회보장의 목적(동법 제1조)과 기본이념(동법 제2조)

-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④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제공(동법 제3조 제5호)
-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⑤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동법 제1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⑥ 사회보장위원회(동법 제20조)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자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제4주차 1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습 목표	1. 사회복지법의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이념적 의미로서의 사회복지법을 헌법 제10조, 제34조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정의 2.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 3.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 4. 사회복지법의 이념적 의미

[학습1]

1. 사회복지법의 일반적 정의

1.1. 사회복지법의 정의

- ① 정의 : 사회복지 관련법들의 총칭
 - * 주의 : 사회복지사업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 * 사회복지정책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제도)임
-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일종(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은 사회복지법들의 모법(기본법)임
- ③ 사회복지 관련법(총70여 종류)
 - 사회보장기본법 : 모법
 - 사회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 기본(모)법적 성격 + 개별법
 - 사회보험법
 - 공공부조법 등

1.2.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분류

1) 협의의 사회복지법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① 보충적, 소극적 사회복지에 관한 법, 선별적 복지정책
- ② 사회복지에 가족과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만 개입

잔여적 복지 개념과 제도적 복지 개념의 비교

잔여적 복지 개념	제도적 복지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 욕구가 예외적인 것이다. ② 문제의 상황이 긴급하고 위급하다. ③ 자신이 가진 자원이나 노력을 다 쓴 후에 비로소 도움을 받게 된다. ④ 문제와 서비스 때문에 오명(stigma)을 남기게 된다. ⑤ 부조는 일시적 개선 또는 마지 못해 하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의 사례나 자선이며, 되도록 빨리 종결짓고자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그 욕구가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언제나 예상된다. ② 문제가 현대생활의 복잡성 속에 잠재해 있다. ③ 파괴되기 전에 도움이 마련되어 있다. ④ 문제나 서비스 어느 것 때문에도 오명이 남지 않는다. ⑤ 서비스는 예방과 재활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것이며 영구적일 수도 있다.

- ③ 일정 조건 이상 충족되면 서비스 중지
- ④ 대상 : 사회적 약자, 사회취약계층
- ⑤ 문제점 : 사회복지권리(수급권)이기보다는 시혜성 복지법이라는 비난 정부의 자선성 복지 취급 받기 오해
- ⑥ 관련법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 * 기본권리(기본권)로서의 사회복지권(사회권)의 이해 필요

2) 광의의 사회복지법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① 보편적, 적극적 사회복지법, 제도적 복지정책
- ②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법
- ③ 기본소득제
- ④ 아동수당

- ⑤ 영국 NHS
- ⑥ 노인지하철 무임승차(해외 : 버스도 해당)
- ⑦ 기초연금 : 선별적 복지제도(70% 이하),
대상자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판별
- ⑧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단독가구 : 202만원 이하(2023년)
부부가구 : 323만2천원 이하
- ⑨ 소득인정액 계산 사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60\text{만원})) + \text{기타 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15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 = $\{ 0.7 \times (150\text{만원} - 60\text{만원}) \} + 30\text{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times (100\text{만원} - 60\text{만원})] +$
배우자 소득 분 $[0.7 \times (120\text{만원} - 60\text{만원})] = 70\text{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1})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 \times 0.04(\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div 12\text{개월}] + \text{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6억원 이상의 고가의 자녀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
소득으로 간주 재산소득에 포함 (예 : 6억원인 경우 39만원,
10억원 65만원 등 주택가격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액이 상승)
(주택가격 등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으로 구분 계상)

2.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

2.1 형식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

- ① 실정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이 존재 - 성문법
- ② 독일의 경우 - 사회법전(사회복지에 관한 총괄법전 존재)
 - 우리나라는 사회법전이 없고, 개별 실정법으로 사회복지법들이 존재
(사회복지 관련법)

- * 우리나라 기본 6법전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 불문법 국가(예. 영국)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든 법이 다 불문법인 것은 아님

[학습2]

3.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

3.1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

- ①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를 지칭(남기민 · 홍성로, 2017)
- ② 현행 사회복지법에서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법에 해당되는 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임

4. 사회복지법의 이념적 의미

4.1 사회복지법의 이념

- 1) 헌법의 기본권과 사회복지법
 - ① 생존권의 보장이 중요한 헌법적 이념
 - 생존권 :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보장을 위해 국가는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151조 제1항)
 - ②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③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헌법의 기본권 적용문제

- ① 헌법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② 성격 : 프로그램설 vs 법적 권리설
- ③ 프로그램설
 - 입법방침규정설이라고도 함
 - 헌법상의 권리 조문은 실제적이거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이념적 이상적 조문
 - 헌법 조문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청구가 부존재
- ④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vs 구체적 권리설로 분류
 - 추상적 권리설(통설)
 - ☞ 다수설, 국가는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음
 - ☞ 국가는 해당 기본권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함
 - ☞ 그러나 국가의 의무사항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봄
 - 구체적 권리설
 - ☞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국가가 구체적 기본권의 보장의무
 - ☞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고 봄

제4주차 2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학습 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발전을 사회법의 발전배경과 연관 지어 기술할 수 있다. 3. 제3의 법(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에 속한 관련법을 분류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발전 3. 제3의 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법에 속한 관련법 분류

[학습1]

1. 사회복지법의 개념

- ① 사회복지 : 물질과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하며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노력
- 사회복지 = 사회 + 복지의 합성어 개념임
 - 개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생존하기 곤란함
 - 국가와 사회의 개입 필요
 - 초기에는 선별적(보충적, 잔여적)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의 기본 정책이었음
 - 열등처우의 원칙 영향(신구빈법의 원칙)
 - 그러나 아직 사회복지권 또는 사회복지권리 개념은 미성숙

사회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학자	개념정의
Friedlander & Apte(1974)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복지와 사회질서의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인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법, 프로그램,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Zastrow(2000)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재정적, 건강과 여가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Romanyshin, J. M (1971)	<p>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하는 것</p> <p>로마니쉬(Romanyshyn, 1971)의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p> <p>산업사회 이전으로부터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문수열 외, 20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2)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3)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4) 최저수준에서 적정수준으로 (5) 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 개혁으로 (6) 자발적 자선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7)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로
국제연합(1971)	개인, 집단, 지역사회, 제도, 및 사회적 수준에 있어서 보다 나은 사회적 기능 또는 사회적 관계를 목표로 한 사회적 서비스 및 인간의 복지를 가능하게 과정이다.
Barker, R. L. (1987)	사회복지는 사회의 유지에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건강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을 돕는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체계이다.
미국사회복지사 협회(NASW)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사회적 · 경제적 · 교육적 · 보건 ·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서비스체계

장인협 외	사회구성원들이 기존의 사회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될 때,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의 총체
김영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의식주와 같은 민생 문제, 소득, 보건, 교육, 주택과 같은 기본적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 좁은 의미의 반사회적 행위, 빈곤, 실업, 가족해체, 지역해체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 문제 (불평등과 사회해체)
행정학 사전	사회구성원의 일정한 생활수준 및 보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

출처: 김영미 외(2022).

②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복지는 매우 광범위함

- 선별적 → 보편적 복지정책
- 헌법에서 사회복지권 명시,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
- 기존의 복지정책의 한계로 기본수당제 도입 등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시험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 조항 범위 폐지 내지는 삭제 검토 중

③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법(행위규범)

④ 산업혁명 이후,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정책 필요

- 시민법의 한계 봉착
- 사적 자치 원칙과 사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수정 불가피

2. 사회복지법의 발전

1) 생존권

- 생존권(기본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조건
- 의식주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조달하고 확보할 권리
- 생존권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국가가 개입하여 확보
- 생존권은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
-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 생존권과 그에서 파생하는 개별적 생존권으로 구분
- 주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단순한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가 아니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존권까지를 포함
- 개별적 생존권으로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적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

- (1) 주 생존권 :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살아가기 위한 권리
- (2) 문화적 생존권 : 문화생활을 할 권리
- (3) 사회적 생존권 : 가족생활과 혼인생활을 할 권리
- (4) 경제적·물질적 생존권 : 최저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청구권, 생활보호청구권
- (5) 노동생존권 : 노동을 할 권리, 노동자의 노동3권
- (6) 환경권 : 쾌적한 환경생활권, 주거의 권리
- (7) 건강권 : 보건에 관한 권리, 의료보호청구권

2) 생존권의 입법화

- ①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생존권을 최초 입법한 이후 각국에서 자국 헌법에 생존권 입법화
 -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생존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음
- ②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한 규범으로서 산업혁명의 역사적 산물
 -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 모순, 사회계층(계급)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 빈부격차(양극화) 해소, 질병, 고령화, 장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입법 필요
 - 미국을 시작으로 사회보장법 제정,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
 - 현대 국가에 들어서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법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음
- 예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 소련(현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체계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발전이 더디거나 자본주의 병폐에서 왔다고 봄
 - 계획경제 추구, 평등사상 만연하나 실질적으로 계급사회, 빈부격차 심화 등 유사 문제

3. 제3의 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3.1. 제3의 법 : 공법 ↔ 사법

- ① 사회복지법의 사회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 19c 말, 형성된 법(신법)
 - 사회법(제3의 법)의 한 영역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보장)
- ② 로마법의 분류 방법 : 공법, 사법 구분
 - 공법과 사법 구분 : 이익설, 주체설, 법률관계설
 - ☞ 이익설 : 공법 → 공적 이익 추구, 사법 → 사적 이익 추구
 - ☞ 주체설 : 공법 → 국가,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
사법 → 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 ☞ 법률관계설 : 공법 → 법률상의 불평등의 관계(권력복종관계, 상하수직적, 종적인 생활관계를 규율)
사법 → 대등의 관계, 횡적인 평등의 생활관계를 규율
- ③ 현대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구분으로 개별법의 공법, 사법으로의 구분이 어려움, 과거의 공법 위주의 법률에서 사법 중심 내지는 사법의 공법화 현상 나타남, 현재는 사회법 출현으로 양자 간의 법 영역이 모호해짐

[학습2]

4. 사회복지법에 속한 관련법 분류

4.1. 사회복지 관련법(각 법에 대한 약술)

- ① 사회보장기본법 : 모법
- ② 사회보장관련법
 -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
 - 공공부조법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 최저임금법(목적 :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서비스법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
- ③ 사회복지사업법 : 기본법적 성격 + 개별법
- ④ 대인서비스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노숙인복지법)
- ⑤ 기타 관련법들
 -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평생교육법 등
- ⑥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복지란 용어가 나오지 않음

※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⑧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고 사업과 관련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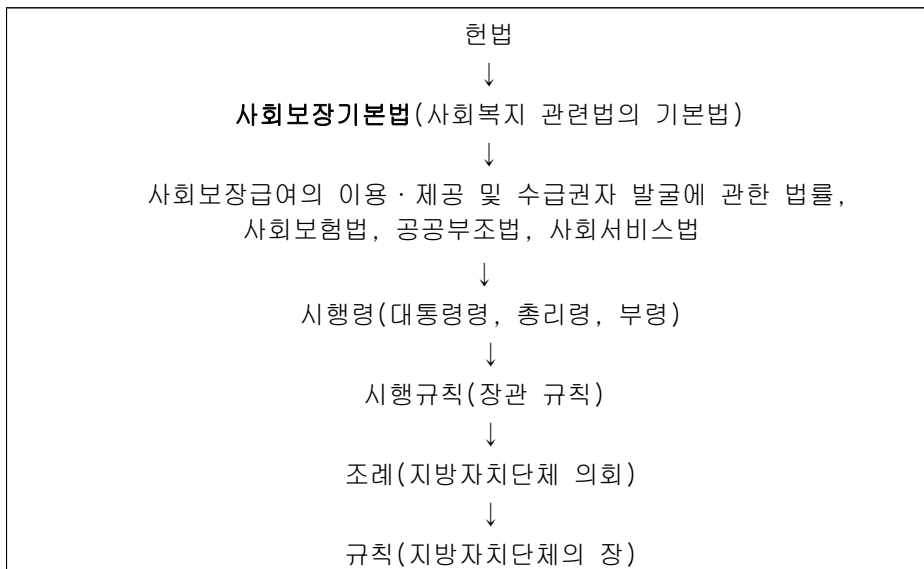
제5주차 1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타법과의 관계
학습 목표	1.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도식화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과 헌법 및 노동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및 조세법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과 민법 및 경제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복지법과 헌법, 노동법의 관계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조세법의 관계 4. 사회복지법과 민법, 경제법의 관계

[학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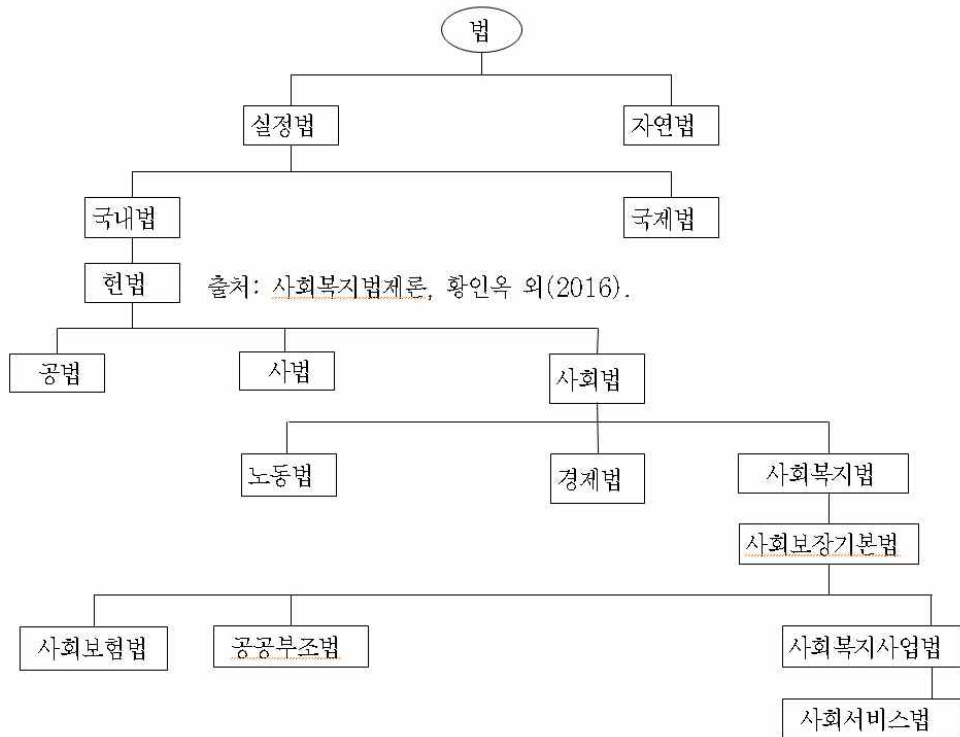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1. 수직적 체계

① 법 체계



②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 관련법 체계



출처 : 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2016).

2. 사회복지법과 헌법, 노동법의 관계

2.1.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의 중요성

1) 법이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체결한 계약

- ① 헌법은 국민과 국가 간에 체결한 가장 근본적인 법
- ② 헌법과 일반 법률과는 입법 절차에서 크게 상이
 - 헌법
 -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
 - ☞ 국회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국회에서 의결된 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개정, 대통령 공포

- 일반 법률의 개정

☞ 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이나 정부의 발의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사회복지권리(사회권)와 관련 주요 조문 발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판례문헌,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생략)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참고 : 국민의 의무

- ② 제31조와 제32조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사항
③ 제38조와 제39조는 의무만 규정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생략)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헌법은 추상적 권리이며 열거식 권리가 아님

-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가 아닌 것이 아님

* 열거식 법률의 사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위에서 기술한 헌법 제2장의 국민의 권리 중 중요한 규정

-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 제11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 제31조 의무교육권
-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 ☞ 제35조 주거권 * 최근 사회이슈

- ⑤ 헌법 제2장 관련 사회복지법(사회법)의 범위 : 사회복지 관련법을
 광의적 또는 협의적 범위
- 광의적 범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해당되는 모든 권리
 - 협의적 범위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관련 규정만

2.2. 노동법과의 관계

-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법에 포함
-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유사점과 차이점

① 유사점

- 사회법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 나아가 생활권 보장을 목적
- 인간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
- 법 체계상의 관계에서 모두 빈민법이 기원
- 1601년 빈민법 대상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 아동
- 노동력 있는 빈민들은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 공장법(노동법)
- 노동력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발전한 법이 오늘날의 공공부조법

② 차이점

-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 사회복지법은 노동자와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노동법은 노동자와 동시에 노동조합을 대상
- 사회복지법은 특정 개개인을 대상
- 노동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관계, 고용관계에 초점
 사회복지법은 노동자, 소비자, 생활인에 초점은 맞추고 성립
- 노동법은 자유계약 원칙에 대해 국가개입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한 법
- 사회보험은 계약자유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법|
 (예) 사회보험의 강제 가입원칙, 사회보험료의 차등부과는 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의미
- 결론, 노동법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관계를 국가의 입법적 개입을 통하여 조정하려는 법

-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생활상의 위험을 매개로 직접적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법

구분	노동법	사회복지법
계약관계	근로계약 (사용자와 노동자)	일반 국민
대상자	노동자	일반 국민 (비 노동자 포함)
계약원칙	계약자유(수정) 시민법에서 수정된 정도	수정된 계약원칙 (보험료 강제가입 등)

[학습2]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조세법의 관계

3.1. 행정법과의 관계

① 유사점

-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 구제에 관한 법
- 사회복지법도 행정법적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
- 사회복지법도 행정관청에 의해 집행
-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은 법률에 의해 세분화 규정, 집행되기 때문

② 차이점

구분	행정법	사회복지법
실익	국가의 행정권 확보를 위한 법	국민의 사회복지권의 확보
성격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체	생존권 확보와 권리주장에 관한 절차

3.2. 조세법과의 관계

① 유사점

- 개인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여 국가가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
- 조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와 조세감면제도가 유사
- 부의 소득세 등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상의 급여제도와 거의 유사한 기능
-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소득재분배 지향의 특성이 공통
(예) 소득공제제도, 조세감면제도 등 소득재분배 효과
- 사회보험에서의 기여금(보험료)과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목적 포함

② 차이점

-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은 그 본래의 목적이 다름

구분	조세법	사회복지법
입법 목적	국가 경비 충당, 조세 강제징수	사회복지법은 특정대상에게 급여 지급
반대 급부	반대급부 요구할 수 없음 - 개인이 세금을 납부했으니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의미	사회보험료의 경우, 기여금에 대한 청구권 존재

결론,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생존권의 보장과 조세법이 추구하는 조세형평주의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4. 사회복지법과 민법, 경제법의 관계

4.1. 민법과의 관계

① 유사점

- 사회복지법은 민법의 조항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음. 사회복지법 내의 사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예)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법은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밀접한 관계 : 부양의무자 관련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 및 제8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제5호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민법의 부양의무 관련 규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삭제 내용 : 호주와 가족 간**
3. 기타 친족 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격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나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③ 민법 제974 부양의무 사항은 꼭 알아 두어야 함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삭제 내용 : 호주와 가족 간**
3. 기타 친족 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④ 참고. 중요 용어 알아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⑤ 차이점

구분	민법	사회복지법
입법 성격	개인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	국가와 개인과의 법률관계로서 공법적 요소가 강함

4.2. 경제법과의 관계

① 유사점

- 경제법은 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시장경제원리
- 사회복지법은 경제질서의 실질적 민주화를 꾀하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적극적, 강제적 개입 요구, 집행

② 차이점

- 경제법은 국가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으로 시장에서 분배의 문제
- 사회복지법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분배의 결과를 다시 재분배하는 문제
- 경제법이 규율하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분배의 결과로 파생한 소득 불균등

- 사회복지법은 누진적인 소득세의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제공
-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함

구분	경제법	사회복지법
입법성격	경제정책적	사회복지정책적
대상	근로자, 경제생활자	모든 국민(사람)

제5주차 2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학습 목표	1. 법해석의 의의 및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법의 적용과 사실 확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을 분류함에 있어서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법의 해석과 종류 2. 법의 적용과 사실의 확정 3. 사회복지법의 분류

[학습1]

1. 법의 해석과 종류

1.1. 법 해석의 의의

보통 법 규정은 구체적인 사회생활에서 널리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법 해석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1.2. 법의 종류

법 해석은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으로 구분

1) 유권해석

- ①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법 규범의 의미를 해석하고, 확정되는 구속력 있는 해석임
 -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해석, 사법해석 및 행정해석을 구분
 - ☞ 입법해석 : 입법기관이 법조문 자체에 해석 규정을 둬으로써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는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 인데,

법령을 통한 법 해석을 하는 것이며, 절대적 강제력을 가짐

예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법해석 :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 해석, 영미법 국가, 법원의 판례가 곧 법원(法源)이기 때문에 사법적 해석은 곧 구속력을 가짐,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판례가 완전한 구속력은 가지지 못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을 기속할 수 있으므로 판결 범위 내에서의 사법 해석에 해당됨.
또한 사법해석은 재판해석으로도 함

☞ 행정해석 : 행정관청에 의한 해석. 법 집행에 관한 구체적 해석이며, 보통 하급관청에서 상급관청에 질의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강력한 구속력이 있음, 행정관청의 결정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해석은 되지 못함

2) 학리해석

① 법 이론을 기초로 한 개인의 학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법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것

- 강제력이 없어 무권해석이라고도 함(유권해석의 반대말)
- 학리해석에는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구분

☞ 문리해석 : 법규의 자구와 문장의 문법적 의미를 기초로 법 규정을 해석, 문리해석이 제1차적 해석방법, 그러나 문자적 해석에 집착하면 본래의 법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음

☞ 논리해석 : 법 규정의 문자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 법칙에 따라 법 규정을 해석, 법 해석의 객관성 확보에 유리, 논리해석에는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연혁해석, 유추해석 등으로 구분

확장 해석	법 규정이 법의 목적에 비해 너무 좁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구의 의미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방법, (예 : 공원에서 수목을 꺾지 말라는 의미는 화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
축소 해석	법 규정의 문리적 의미가 너무 넓어 이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
반대 해석	법 규정의 내용을 해석할 때, 어느 일정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 (예 : 권리주체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면 반대로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물론(勿論) 해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하다고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적용하는 해석 (예 : 우마차 금지에는 당연히 자동차도 포함됨)
보정(보충) 해석	법 규정에 오류가 있을 시 이를 바로 잡아 본래의 뜻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
연혁 해석	법안의 이유서, 초안, 입법 경과, 의사록, 전문가의 보고서 등 입법(안)의 여러 기초자료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
유추 해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유사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 * 주의 : 유추는 해석의 한 방법이나, 준용은 법 기술상의 방법으로 중복기술을 피하기 위함

2. 법의 적용과 사실의 확정

2.1. 법의 적용

- ① 법의 적용 : 법의 내용을 사회생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실현시키는 것을 의미
 - 법 적용 순서 : 사실 확정(문제) → 적용할 법 규범의 발견 → 법 해석 후 적용

2.2. 사실의 확정

- ① 사실의 확정 :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 사실의 존재 형태를 확정짓는 것
 - 추정 : 존재 또는 부존재를 가정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되면 반증할 수 있음
 - 간주 :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하는 경우로서 입증에 의해 반증될 수 없음
예 : ~간주한다. ~본다.

[학습2]

3. 사회복지법의 분류

3.1. 상위법과 하위법

- ① 법체계는 수직적 체계로 이루어짐
 -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 상위법인 헌법을 하위법들이 위반할 수 없음(위헌법률)

3.2. 일반법과 특별법

- ① 법은 법 적용 및 효력에 있어서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으로 구분
 - 일반법 : 법 효력의 범위가 넓은 보통법(~기본법)
 - 특별법 : 법 효력이 제한되게 적용되는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3.3. 원칙법과 예외법

- ① 원칙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② 예외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예외법은 원칙법을 배제하므로 원칙법의 보충적 관계에 있지 않음
 - 예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조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 ⑤ (생략)

3.4. 강행법과 임의법

- ① 법 규정의 적용이 강행적이나 아니면 임의적이나에 따라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구분
 - 강행법 :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예 : 공법)
 - 임의법 :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법(예 : 사법)

3.5. 신법과 구분

- ① 문자 그대로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구법에 이어 대응하는 법으로써 신법에 대체되어 폐지된 법을 말함
 -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과규정 또는 부칙을 둠
 - 법의 체계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
 - 법의 규율대상인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
 - 시민법과 사회법으로서 적용영역의 표준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 구분함
 - 법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는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구분
 - 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

3.6. 자연법과 실정법

① 자연법

-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법으로 실정법에 대비되는 법 개념
-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자연법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② 실정법

- 실정법은 경험적·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써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민족이나 사회 및 국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데, 민족과 국가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요구하는 규범을 명문화한 것
- 실정법에서의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으로 실정법에는 공법, 민법, 사법이 있다. 실정법에서 국제법이란 국가 상호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한 국가 간에 통용되는 법(조약, 국제관습법, 국제법규 등)
- 여기에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성문법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관습법·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인 사실에 기하여 성립되고 현실로 행해지고 있는 불문법도 있음

3.7. 공법과 사법

- 헌법·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국내 통설
- 민법·상법 등은 사법으로 속함
-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학설 중 이익설, 주체설, 법률관계설, 생활관계설 등이 있다.
- 이익설은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법이라 하고,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법이라고 하는 견해

- 주체설에는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려는 견해
- 법률관계설은 권력, 복종의 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평등, 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함
-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 관계를 국가생활 관계와 사회생활 관계로 나누어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견해

3.8. 시민법과 사회법

- 공동체를 유지해 오던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탄생한 시민사회는 새로운 법질서를 확립하게 되었으나,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됨
- 이렇게 성립된 새로운 법질서를 시민법이라 일컬을 수 있고, 그 후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사회법이라고 함

3.9.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권리·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태 자체의 실체법으로는 헌법, 행정법, 형법, 상법이 있고, 절차법으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파산법 등이 있다.
-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실체법이 목적인 데 대하여, 절차법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3.10. G. Radbruch의 견해

- G. Radbruch는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분야를 사회복지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자본주의를 순수하게 유지하려는 국가나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존재가 가능하다.
- 사회복지법 체계의 필요성은 법률생활의 안전·신속·논리성 확보이며, 사회복지법체계는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적인 기준(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의해 분류될 수 있어야만 체계화가 가능

- 또한 사회복지법 체계미비의 요인(예를 들면 민법을 인용)으로 준비과정, 형식적인 입법, 일방적인 입법과정과 그 분류는 배타적, 총망라, 일관성과 계층적 특성을 들 수 있음

3.11.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① 보험의 원리

-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겐 생활상의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원리를 의미
- 보험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특수직역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선원보험법 등이 있다.

② 보상의 원리

-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들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급여하는 원리를 의미.
-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 및 귀순복한동포 특별원호법, 재해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보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③ 부조의 원리

- 개인의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국가의 재정에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원리
- 자립상실자, 소득능력 결여자, 소득능력의 미 확립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원리이다.
- 부조의 원리에 의한 현금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자산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 받는다는 특징

④ 원조의 원리

- 부조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인 상담, 생활지도, 재활서비스 등이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보호, 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재가복지,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기관운영, 정신질환자와 나병 완치자 등,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6주차 1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이념 : 생존권
학습 목표	1. 생존권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3.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4.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실현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3.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학습1]

1. 생존권의 의의

1.1. 의의

1) 시민법 사상의 한계

- ① 자유자본주의의 문제점
 - 불평등, 부자유, 빈부 격차
 -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문제점

2) 20c 자유권적 기본권 수정 필요

- ① 형식적 야경국가 체계의 한계
- ②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경제 체계에의 개입
- ③ 생존권 필요성
 - 국가에 의한 최저생활 보장 필요성 증대
 - 기본적 소득보장, 의료보장, 산재 등
 - * 시장경제주의의 한계

3) 독일 바이마르헌법에 생존권 최초 명시(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유권(소유물의 사용, 수익, 처분)은 의무를 수반한다.
노동력에 대한 국가의 보존 등의 규정에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바이마르 헌법의 세계 전파 : 각국 헌법에 반영,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전파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2.1. 법적 성격

1)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
- ② 교육권, 근로권, 사회복지권,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생존권에 포함

2) 생존권의 법적 성격의 구분

- 프로그램 규정설 vs 법적 권리설

3) 프로그램 규정설

- 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사회복지의 목표 또는 입법 방향 정도만을 제시한 것
- ② 국가(입법부)에서 해당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이행 청구소를
제기할 수 없음
- ③ 법이 미비하다고 입법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④ 국가의 입법 의무 강제 불가
- ⑤ 생존권의 본질적 이념에 불성실한 이론임
- ⑥ 국민의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인
 - * 생존권 보장 미미

4) 법적 권리설

- ①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
표시임

- ②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로 구분
- ③ 추상적 권리설
-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등을 강구할 추상적 책임(의무)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 헌법재판소 의견
 - 구체적인 입법 없이는 생존권 실현 가능성 없음
 - 생존권은 실질적인 권리로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음 (재판 사례)
- ④ 구체적 권리설
- 입법화 되어 있지 않아도 국민은 생존권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설
 - 국가는 적극적으로 생존권 보장의 의무를 진다고 봄
 -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생존권도 구체적인 입법사항 없어도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설
 - 국가의 입법 부작위위업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설
- 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을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생존권의 보장은 현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함
 - 입법촉구도 가능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천의지 필요
 -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적 체계 요구됨

[학습2]

3.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3.1.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 의의

- ①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이것은 생존권 기본권의 핵심
 - 이념적, 총칙적 규정임

4.2. 권리의 주체

- ① 권리의 주체 : 국민
 - 자연인만 해당,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4.3. 권리의 내용

- ①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의 유지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은 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예산 등의 영향을 받음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역시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음
 - 국민소득 수준, 생활수준, 국가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간의 이익 상충 등 고려해야 함
- ② 인간다운 생활의 수준
 - 생물학적 수준
 - ☞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
 - ☞ 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설
 - ☞ 인간적 최저생존수준설
 - ☞ 정신적 존재로서의 이상적 최저생존수준설
 - * 가장 바람직한 수준
 - * 현재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면 인간적 최저생존수준설이 보다 합리적, 현실적임

4.4. 국가의 의무 - 헌법 제34조 제2항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5. 국제인권규약

-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선언(1948)을 구체화시켜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했다.
- 1976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한 다자간 강력한 조약이다.
- 우리나라는 1990년 가입
- 인권규약 중에서 A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계되고, B 규약은 자유권 보장에 관한 것과 아울러 사회복지·사회보장에 관련된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A 규약은 노동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권, 기초생활 향상권, 교육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B 규약은 생명권, 인도적으로 대우받을 권리, 평등한 법적용, 사생활보호 등의 권리를 규정
- 국제인권규약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 제9조의 사회보장수익권은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실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에 대하여 규정
- 국제인권규약 제10조는 가정복지, 아동, 부인 및 근로여성 등의 복지서비스 보장에 대하여 규정. 1항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
- 2항은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

-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 3항은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1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
-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 제11조 2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4.6. ILO(국제노동기구)

- 오늘날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의한 인권보장에 대해 ILO가 맡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 ILO는 창설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연합의 협력 전문기관으로서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 수준에 관해서 그 체계와 권리보장을 실현해 왔다.
- ILO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조약은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 「모성보호조약(1952)」 「산업재해·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1964)」 「노령·유족연금에 관한 조약(1967)」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1969)」 등을 들 수 있다.

제6주차 2차시	
강의주제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학습 목표	1. 실질적인 법령 예시를 통하여 법령의 형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입법의 절차를 열거할 수 있다. 3.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 4. 국회의 입법추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법령의 형식 2. 입법의 절차 3.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 4. 국회의 입법추진 과정

[학습1]

1. 법령의 형식

- ①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등), 법 규범 전체를 뜻하기도 함
- ② 법령 : 법 형식, 공포번호, 제명,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
- ③ 법 형식 :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법령의 종류
- ④ 공포번호 : 법령의 법 형식별로 부여하는 일련번호
- ⑤ 제명 : 법령의 이름
- ⑥ 본칙 : 법령의 본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
- ⑦ 부칙 : 법령의 본체적 규정사항에 부수되거나 경과적인 성격의 사항을 기재 (예 : 시행일, 경과조치 등)
- ⑧ 법령의 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 형식 및 공포번호>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 <주무부서>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본칙>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4. (생략)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

- 부칙 <법을 제6024호, 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영유아보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 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 제2항 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 <최근 수정 부칙은 마지막에> 부칙 <법률 제14224호, 2016.5.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2. 입법의 절차

- ① 광의의 절차 : 법안 작성을 위한 제반 노력까지 포함(정책 간담회 등)
- ② 협의의 절차 :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부터 개시
- ③ 입법은 법률의 제·개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입법인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도 포함
- ④ 법률의 제·개정은 전부개정, 부분개정, 폐지로 분류
- ⑤ 법률안 제출 주체 : 국회(국회의원 10인 이상 찬성), 정부(헌법 제52조)
- ⑥ 법률안 제·개정 의결은 국회에서만 가능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⑦ 법률 개정안 예(정신보건법)

법률 제14224호(2016.5.2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전부개정]

- 개정이유

- ☞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학습2]

3. 정부의 입법추진 과정

<입법 과정 개요>

단계별	단계 내용	추진 내용
1	입법 정책 단계	국정운영 방향 설정 입법정책 수립
2	입법 계획 단계	자체입법계획 수립 정부입법계획 수립
3	법령안 작성 단계	사전준비 법령안 요강 작성
4	기관 간 협의 단계	부처협의, 당정협의, 규제심사
5	국민의견 수렴 단계	입법예고 공청회 입법청원
6	법령안 심의 단계	형식심사 - 법제처 접수
7	결재 단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8	접수 단계	법제처
9	국회 심의 단계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10	접수 단계	법제처
11	심의 재가 단계	국무회의
		대통령
12	접수	법제처
		공포, 관보 게재

4. 국회의 입법추진 과정

<입법 과정 개요>

단계별	단계 내용		추진 내용
1	제기 단계		제출, 발의-접수-의장 결재-본회의 보고-소관위원회 회부
2	심의 단계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접수-위원장 결재-위원회 보고 -상정-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공청회, 연석회의)-소위원회 구성(심사,의결)-법제사법위원회 회부(심사요청)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위원회 접수-위원장 결재-위원회 보고 -상정-전문위원 검토보고-질의-소위원회 구성(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토론 -축조심사-위원회 소결-소관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4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접수-위원장 결재-위원회 심사 보고서 제출
5	의결 단계	본회의 심사	의장 결재-본회의 상정-소관 상임위원장 심사보고-토론-의결
6	법령안 심의 단계		자구정리-정부 이송

4.1. 국회의 회기와 활동

- 대한민국 국회의 2022년 국회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국회법」에 따라 연간 6차례 임
- 시회 집회, 상임위원회 매월 2회 이상 개최 및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매월 3회 이상 개최 준수를 통해 일 잘하는 국회상 정립
- 국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최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하며, 국회는 회기동안 활동 능력을 가지며 안건을 심사함.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일정은 100일 이내

- 주요활동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 등을 실시
- 임시국회는 30일 이내이며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열리며,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함
-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며 17개 상임위원회, 2개 상설특별위원회, 7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 국회의 권한은 3가지로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의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4.2.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 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제7주차 1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권리
학습 목표	1. 인권, 시민권 및 사회복지권을 비교할 수 있다. 2. 시민법과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기본권과 생존권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기술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인권, 시민권 및 사회복지권 2. 시민법과 자유권적 기본권 3. 사회보장기본권과 생존권 4.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학습1]

1. 인권, 시민권 및 사회복지권

① 인권

-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영어로는 Human Rights
- 천부인권사상,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의 권리이므로 실정법에 의하여 제한 받는 일은 예외적
- 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② 인권의 특징

- 인권은 기본권(fundamental right)이고, 필수적인 권리
- 인권은 보편적(Universal) 인권을 의미
-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이상의 것
- 인권은 정의임
- 인권은 사회적 책임

③ 사회복지법은 인권의 보장을 기초

④ 시민권

- 마샬(Marshall) :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민권 - 자유권 / 정치권 - 참정권 / 사회권 - 복지권(생존권)

⑤ 기본권

-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정치권
- 청구권
- 사회권(복지권, 생존권) 등

⑥ 사회복지권(사회권, 생존권)

-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최저생활보장
- 관련법 :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⑦ 관련 법규

- 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 권리부문(제10조~제37조)

<주요부분 발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시민법과 자유권적 기본권

- ① 생존권 이념의 형성 -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계
- ② 시민법 체계의 전개와 발전 이념 - 자유권
- ③ 근대 시민사회 - 상품교환과 자유경쟁 원리에 따라 형성
- ④ 상품교환 : 상품소유자, 교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의 성립
 - 국가 개입 불필요, 오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존재 필요
 - 개인의 자기책임의 원칙 * 당시에는 개인의 인권 존중과 보호라고 판단
- ⑤ 사적 절대소유의 원칙
 - 개인주의 사상 지배, 개인의 자유와 책임 강조, 가진 자의 소유권 보호에 역점
- ⑥ 부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문제 발생, 시정요구 격렬
- ⑦ 절대적 사적 소유권에 대한 비판 비등 -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기초로 한 생존권 주장

[학습2]

3. 사회보장기본권과 생존권

- ① 기존의 노동법의 한계
 -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법이 필요
 - 사회보장법 제정
- ② 사회보장기본법 : 노동법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의 보호와 보장이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사회보장의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와 삶의 질 향상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 개인사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봄
 - * 과거에는 당연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간주)
-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
 - * 사회문제(Social problem)로 인식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사회문제란?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 ·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

그 종류는 일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대적 · 지역적 조건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자체로서 분류하고 유형화하기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로 취급되는 것으로는 **노동문제, 토지문제, 실업문제, 인구문제, 인종문제, 민족문제, 도시문제, 농촌문제, 주택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 가정문제, 범죄문제, 비행문제, 매음문제** 등이 있다. 또 **평화문제, 식민지문제, 학원문제** 등도 사회문제로 여길 수 있다. 이처럼 한마디로 사회문제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나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출처 : 사회복지용어사전)

- ③ 사적 부양 원칙의 한계
 - 노동자의 재해 등 문제는 개인이 고용주 상대로 해결하기 곤란
 - 개인의 빈곤문제 → 자본주의 병폐에서 출발
 - 개인의 빈곤문제를 개인문제로 국한하기 곤란, 사회문제화
 -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의 필요성 대두
- ④ 생존권은 자유주의 시민법 사상을 수정하게 됨
- ⑤ 사회보장법 : 세계 1, 2차 대전을 거쳐 노동자의 권리보호로는 한계를 느껴 국민 전체로 확대

- 노동자와 그 가족 보호 정책 → 전 국민 사회보장 정책으로 전환
-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

4.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① 헌법에서 규정한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냐?
 - 법 해석 의의와 방법 유사
- ② 프로그램설 vs 구체적 법적 권리설(4주 1차 내용 참조)
 - 통설 : 법적 권리설 - 추상적 권리설(재판규범이 될 수 없음)
 - 구체적 권리설 -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고 봄

제7주차 2차시	
강의주제	사회복지수급권
학습 목표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요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4. 수급권의 소멸 규정과 수급관련 벌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요 2. 수급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 3.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4. 수급권의 소멸규정과 수급관련 벌칙

[학습1]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요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청구권 (국가는 이에 대한 의무 존재)

① 사회복지수급권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의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제3항~제5항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6항은 일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 사회권적 기본권(?)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서의 교육권,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환경권, 보건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권 명시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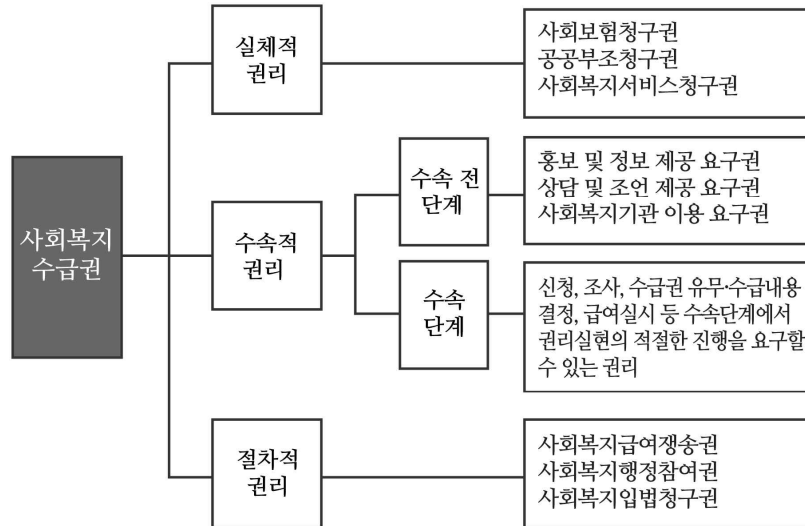
제9장 경제

제119조

-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수급권 : 금전적 급여 및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할,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
- ③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서 청구권
- ④ 20c 무산대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은 국가의 의무
 - 자유권의 수정 → 사회권 출현
- ⑤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 사회복지수급권의 핵심적 권리로서 실체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 수속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 절차적 권리 : 실체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절차적 권리로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 있음



사회복지수급권의구조

2. 수급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

- ①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사회복지수급권을 자신들의 권리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시혜성적 권리 내지는 구빈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있음
 - 송파구 세 모녀 사건 * 대표적 복지사각지대 발생 세 모녀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 ② 처분, 압류, 상계 금지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민법 : 채권은 양도 가능
 - 공법 : 권리양도 불가, 일신전속권적 해석
 - * 일신전속권 : 권리의 향유 및 행사가 특정 권리자의 일신에 전속하여 권리자와 분리할 수 없는 것, 양도, 상속이 안 됨 (예 : 인격권, 가족권, 부양청구권, 친권 등)
- ③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자의 이익 변경되지 아니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반환명령)

-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④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금지
-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는 조세 및 공과금의 부과 금지 규정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이 법에 따른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학습2]

3. 수급자의 의무와 권리

- ① 수급자는 거주지역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 의무
- ② 신청조사에 응할 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보장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4. 수급권의 소멸규정과 수급관련 벌칙

4.1. 사망

- ① 사회복지수급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수급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
- ② 수급자가 실종선고 된 경우도 해당
 - 실종선고
 - ☞ 민법 제27조 ~ 제29조 : 부재가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의제

4.2. 포기

- ① 사회복지수급권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음
- ② 위 수급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③ 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때는 포기할 수 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4.3. 시효

- ① 사회복지수급권은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
- ② 고용보험법 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년,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3년, 5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 ②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 ③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 제5항에 따라 고지가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③ 벌칙 - 행정벌

- 행정형벌(형법상 벌) : 징역, 벌금

* 양벌규정 : 행위자와 법인 처벌

사회보장기본법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 제3항(제4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를 위반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8.4.]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질서벌 :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 ① 제13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 4, 제18조 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 3, 제34조의 4,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33조의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